

유·보 통합 전략의 모색: 한-OECD 국제세미나 지상 중계

김은설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2월 25, 26일 양일간 ‘OECD 국가 사례를 통한 유·보통합의 전략 모색’을 주제로「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및 OECD의 교육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주요 발표자로는 OECD 교육 기술부문 영유아 및 학교 담당 과장 Yuri Belfali(유리 벨팔리), 핀란드 헬싱키대 Lasse Lipponen(라세 리포넨) 교수, 뉴질랜드 교육평가사무국 특별과제 책임자 Sandra Collins(산드라 콜린드),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Tove Mogstad Slinde(토브에 몽스따 슬린데)선임고문, 영국 런던대학교 Peter Moss(피터 모스) 명예교수가 각국의 유·보 통합 사례 및 주요 사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으며, 뒤이어 활발한 심층토론도 이루어졌다. 이번 호「육아정책포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간 통합이 화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하여 기 개최된 국제 세미나를 지상 중계함으로써 주요 내용들을 널리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아래 본문에서는 국제세미나에서 각 국가가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OECD 국가의 전반적인 ECEC 정책 경향은 어떠합니까?

Y. Belfali: 현재 OECD국가들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의 전반적인 현황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ECEC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80%~90% 이상이지만 스위스, 터키, 호주의 경우 10% 미만이거나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OECD에 속한 국가들의 ECEC 서비스 등록

률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6% 증가했고,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아동의 ECEC 참여율은 85%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Yuri Belfali
OECD 영유아 담당 과장

둘째, ECEC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ECEC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는 전체 지출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3세 아동들의 보편적 ECEC 접근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유아 교육과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ECEC의 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위해 명확한 정책적 목표와 최소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하고, 아동의 양질의 학습과 발달을 위해 커리큘럼 틀과 학습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교사 모집, 개발, 훈련, 지속적 커리어 개발과 같이 인력의 측면에서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며 ECEC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확실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Y. Belfali: 분할 시스템은 목표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일관되고 향상된 시스템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 시스템은 지속적인 아동발달 경험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제도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것은 아동의 발달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분할보다는 통합시스템이 아동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또한 통합을 통해서 재정, 행정,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진됩니다. 이는 개발 정책, 훈련 시스템 등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최적화되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Peter Moss
런던대학교 명예교수

P. Moss: 통합은 3세 이상 뿐만 아니라 출생부터 시작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교육은 보편적 복지권이며 공공적 책임입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교육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자격 및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교육시스템 하의 학교에서는 대졸출신 교사가 일반적이고, 교육은 이런 점에서 보육 및 복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교육, 보육 분할시스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육, 보육 분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불균형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는데, 둘 중 하나가(주로 보육서비스가) 장소, 접

근성, 자금, 비용 및 인력 부문에서 뒤떨어지고, 아동과 부모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단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비스가 단편화되어 총체적인 접근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일부 국가들은 개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복지로 통합되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교육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즉 북유럽 국가, 발트3국, 브라질, 영국,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Y. Belfali: 국제사회에서 ECEC 정책과 통합에 대해서는 각 국가 간의 지식 격차가 존재합니다. 즉 통합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므로 여러 국가의 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를 개발하고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경험과 아동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한 통합의 영향을 보여주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통합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ECEC 내에서 연령대 뿐만 아니라 ECEC와 초등학교 사이의 전환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보 통합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P. Moss: 통합은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전 통합은 8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7가지는 서비스 조직과 관련한 구조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에는 정책입안 및 행정, 평가를 포함한 규제, 교과과정,

접근성, 인력, 자금, 그리고 지원 유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는 보육 및 교육이 진정으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통합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유아교육 및 보육입니다. 완전 통합시스템에서는 동일 연령대 모든 아동을 위한 지원에는 한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단편적 서비스가 서로 분리되기 보다는 0~6세 아동을 위한 센터에 한 가지 유형 또는 0~3세 아동 그리고 3~6세 아동을 위한 지원에 한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경우 3가지 차원에서 통합을 이룬 부분통합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 및 정책 입안은 1998년에 당시 교육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규제통합이 있었고, 이제는 모든 학교 및 기타 아동대상 서비스를 사찰하는 국가 기관이 아동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규제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통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인력은 보육사와 교사 두 부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보육은 부분적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이용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세제를 통해서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기관에 대한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서비스 자체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원 유형도 통합되지 않아, 광범위한 단편적인 서비스, 보육원, 어린이집, 놀이학교,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념적인 차원의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보육'과 '유아교육'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유·보 통합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P. Moss: 완전 통합의 사례로 스웨덴을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통합의 8가지 차원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우선 1996년 교육부로 이관된 행정 및 정책입안권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시스템은 초기에 복지로 통합되었다가 이후 교육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실제로 통합 교과과정, 즉 1~5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 교과과정을 뜻합니다. 부모의 고용여부와는 관계없이 1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권을 의미합니다. 전체 인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1~5세 아동을 위해 일하는 대졸 유아교사 기반의 통합 인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급자 지원은 해당 서비스 기관에 직접 투입되고, 3~5세까지는 무상 교육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5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체기관인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12개월 전에는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물습니다. 이들은 부부간 공동육아를 지원하며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는 육아휴가 시스템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와 휴가 정책 또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스웨덴 통합 사례의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본래 분할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시스템 개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1968년에서 1972

년 사이 보육위원회는 반일제 유치원과 종일제 어린이집을 단일 기관 및 개념의 유아학교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적 학습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과 보육을 주요 기반으로 삼는 기관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보육과 교육의 이상적인 결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반일제와 종일제 서비스는 직원 교육 및 업무관행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고, 이들의 통합은 반일제 서비스 유치원 교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경력이 짧은 유아학교 교사들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완전 통합은 12개월에서부터의 총체적 유아교육 및 보육이 아동에게 있어 보편적 복지권이고 유아교육 및 보육은 공공적 책임이며 유아학교는 학교처럼 중요한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통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적 그리고 전문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통합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 통합을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자원'입니다. 분야간 불균형이 사라짐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자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 향상 및 임금 개선, 전 아동 대상 복지권 확대 등이 있습니다. 유아관련 공공 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완전 통합시스템을 갖춘 스웨덴은 1.6%이며, OECD 평균은 0.8%입니다. 완전 통합에는 재구조화뿐 아니라 재고(re-thinking)가 필요합니다. 즉 개편을 위한 행정적 조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재고는 재구조화를 위한 강력한 근거를 마련 해 주고 견고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탄탄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유아교육뿐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체 및 대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의 재구조화 및 재고는 나아가 교육시스템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가별 유아교육과 보육, 그리고 통합은 어떤 모습입니까?



Lasse Lipponen
핀란드 헬싱키대 교수

L. Lipponen: 에듀케어(educare)는 핀란드의 유아교육의 교육학을 논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아동을 다룰 때 교육과 보육을 모두 고려하도록 두 단어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아동의 균형잡힌 성장과 발달, 그리고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교사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기반의 교사교육이 헬싱키 대학교 및 핀란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격취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폴리테크닉(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아 사회교육가(social pedagogue)가 되는 방법입니다. 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유치원 선생님은 교육학을 공부했고 사회교육가는 사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둘은 배경이 매우 다르지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회교육가들은 아동 자체보다는 가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둘의 접근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T. M. Slinde: 노르웨이의 유치원 활동의 핵심에는 보육, 놀이, 학습, danning이 있으며 전체적인 교육적 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anning”(영어로 formation) 개념을 교육학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교육적 발달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놀이 기반이고 아동 중심이지요. 노르웨이의 유치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센터 중심의 유치원, 가정 중심의 가정유치원, 개방형 유치원이 그것입니다.

2014년 현재 노르웨이 아동의 98%가 센터 중심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2%만이 가정 중심의 유치원을 다닙니다. 또한 아동의 52%만이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48%는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어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정책



Tove Mogstad Slinde
노르웨이 교육부 선임고문

을 시행하는 교육부, 교육훈련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광역지사체장(county governor)이 있고, 지역적인 차원의 가장 중요한 지역 기관이 있으며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것은 지역정부가 인가, 안내, ECC 환경의 감사 등을 책임지며, 또한 학교 정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ECEC 업무가 아동가족부에서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시사점, 논의의 측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은 가족, 부모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과 모든 기관에서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에서는 1세 이상의 아동 중에서 80%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참여하고 있고 3세 이하는 선생님 1명당 아동 7~9명이고 4세부터는 14~18명입니다. 직원 대 아동 비율은 3세 이하는 직원 1명에 아동 3명, 4세 이후는 직원 1명에 아동 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 Collins: 1986년에 유아센터(childcare center)에 대한 책임은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서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로 넘어갔습니다. 그 직후인 1980년대 후반에 유아교육 및 보육이 교육부에 포함되었고 교육 개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내일의 학교(Tomorrow's School)'라는 것이 생겼고 학교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도 만들어졌지요. 아동이 어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가 유치원, 가정기반 서비스 등 형태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기금을 받도록 하고, 또한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andra Collins
뉴질랜드 교육평가사무국 책임자

또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선생님을 더 많이 양성하는 것이었고 모든 유아센터(early childhood center)에 100%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았습니다. 2010년에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은 독립적인 교육부 자문작업반(ministerial advisory task force)을 신설했습니다. 이 작업반은 보고서를 통해 시스템 질 개선, 기금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부기금의 효과적 사용, 책임감 증진 등을 권고했는데 이러한 권고안 중 일부는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인력통합은

1987년에 시작되었는데, 3년에 걸쳐 유치원 교육(training)을 통합해서 3년 학위 과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훈련은 2년 과정이었고, 훈련과 아동보육은 보다 낮은 수준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년 교사 교육 과정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100% 자격을 갖춘 선생님만 받겠다는 목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 정부는 100%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에게만 급여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80% 자격자에게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1996년부터 5년에 걸쳐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Te Whāriki>로 ‘매트’라는 뜻입니다. 개별적 원칙과 내용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커리큘럼이 <Te Whāriki>의 원칙과 내용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유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보 통합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S. Collins: 통합 실시 합의 이후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과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부분의 통합 외에도 질 높은 커리큘럼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균형 있는 예산배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L. Lipponen: 보육(daycare)과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은 명백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기관 및 시설에 따른 교사양성과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 M. Slinde: 기관 통합에 따른 인력의 통합이 1975년 바네하그의 형성과정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와 달리 노르웨이의 경우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한계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통합의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 요구되는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S. Collins: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통일된 정부지원금이 없으며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영유아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고 소외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단위의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통합 발표 이후,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일한 연차의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에듀케이션 카운트’라는 재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교사 자격과 양성과정은 어떠합니까?

S. Collins: 뉴질랜드는 1987년부터 통합하면

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Teacher Council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교사 자격과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T. M. Slinde: 노르웨이는 1975년에 보육기관과 유치원을 통합하였으며 교사 구성은 여러 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여러 종류의 교원들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숙련된 사람들이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별도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사도 취학 전 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코스인 ECTS를 60시간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로서의 채용도 가능합니다.

L. Lipponen: 핀란드는 교사가 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학 3년 과정의 180학점을 이수하거나 폴리테크닉에서 '사회교육자'에 대한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이 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모의 개념)는 법으로 정해

놓은 일련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본인의 가정에서 4~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 Collins: 뉴질랜드에서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0~8세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한 적 있는데 이는 아동만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멘토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S. Collins: 뉴질랜드의 유아교육기관 평가 조직인 ERO(Education Review Office)는 교육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교육부와 함께 일을 하지만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RO는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입니다. 교육부는 규정, 면허, 기금, 정책개발 및 도입, 지도안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모습(2015. 2. 25.)

과 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ERO는 고등교육 이전(pre-tertiary)의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RO는 2008년 규정에 모든 교육·보육 서비스가 준수해야 하는 4개의 기준을 밝혀두고 있는데, 커리큘럼 기준, 건강과 안전 기준, 전제 기준, 거버넌스와 행정관리 기준입니다. 그러나 센터 기반, 가정 기반, 병원 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서비스(기관) 평가는 4단계가 있으며 결과는 공공문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대상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4년 동안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기관이 잘 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3년 내에 다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기관이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고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2년 내에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력해서 그 기관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년 후에 다시 평가를 실시했을 때 개선되어 있지 않으면 ERO는 그 기관을 교육부에 고발합니다.

ERO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 또는 원장 등 운영경영에 관련했던 15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자율점검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별도의 책자로 기준과 지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각각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의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업내용 관찰뿐만 아니라 센터의 교사, 리더들이 질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활동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지표를 활용하는지, 자체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논의하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T. M. Slinde: 노르웨이는 전국적으로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싶어 하나 ERO 같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S. Collins: 뉴질랜드는 ECEC의 목적이 무엇이나를 정할 때, 당시 여성해방, 가족들의 가정생활의 도움 등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유아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유·보 통합에서는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 Lipponen: 핀란드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 보면,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가족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이를 위한 서비스'인지라는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 M. Slinde: 노르웨이는 통합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관을 이동한 경우이므로 행정적 통합과정에 대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아일랜드는 유·보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갖고 같이 주요 미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합과정에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